

Vol. 35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현안보고서

제35호 2009.9.3

|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0631-14 |

Vol. 35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 이현출

Tel:788-4530 / Fax:788-4539

E-mail: hclee@nars.go.kr

요 약

-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는 ‘민주당 압승, 자민당 참패’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바람이 아니라 자민당 일당 또는 연립에 의해 지배되어온 이른바 ‘55년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일본정치의 지각변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선거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절대안정다수의석을 확보하였고, 연립의 가능성이 높은 사민당, 국민신당 등의 의석을 합하면 총의석의 2/3를 넘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 참패의 원인은 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고도성장 기반의 붕괴와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양극화, 파벌다툼과 세습정치, 뿌리 깊은 정관유착 구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자민당 책임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함께 이탈하는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조직을 흡수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데서 비롯되었음
- 민주당은 정권공약(manifesto)을 통하여 “생활을 위한 정치”를 내걸고 이의 실천을 위한 원칙으로 △ 료중심의 정치로부터 정치가 주도의 정치로, △ 책결정을 정부·이당의 이원체제로부터 내각으로 일원화, △ 적인 이권사회로부터 획적인 유대형 사회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주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 대외정책은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 구축을 내세우면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외교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경제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 수출보다는 내수, 사회안전망 확충에 비중을 두고, 고용과 환경을 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매니페스토에 명문화하고 있을 정도로 우애를 강조하여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수면 하에 잠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토문제, 교과서 문제 등은 여전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하토야마 정권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자민당 정권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외교·안보·경제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내는 물론 국민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도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일 것임
- 일본의 정권교체는 한국과 한국 정치권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며,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 선거를 통하여 책임지는 정치,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치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민당 중심의 외교채널에 있던 정치인이 대거 퇴장함에 따라 새로운 의원외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맞물려 동아시아에서의 역내 통합에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한일 FTA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업분야별 대비책과 협상전략의 마련이 요구되며, 분배지향적·수시향적 경제정책이 가져올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면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임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총선결과 분석 / 4

- 1. 선거제도 4
- 2. 당선자 분석 4
- 3. 투표율 변화 8
- 4. 파벌정치에 미친 영향 8

III 자민당 참패의 원인과 배경 / 11

- 1. 자민당 참패의 원인 11
- 2. 정권교체의 역사와 배경 13

IV 민주당 정권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전망 / 15

- 1. 민주당 매니페스토 15
- 2. 국내정치 19
- 3. 대한반도 정책 20
- 4. 대아시아· 미정책 23
- 5. 경제정책 25

V 하토야마의 리더십과 민주당 정권의 과제 / 27

- 1. 하토야마의 정치와 리더십 27
- 2. 과제 29

VI 시사점 / 33

- 1. 정치적 측면 33
- 2. 외교적 측면 34
- 3. 경제적 측면 35

□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민주당 매니페스토 추진일정표	18
[표 2] 민주당과 자민당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22

그림 차례

[그림 1] 총선 결과	2
[그림 2] 당선자 출신분야	5
[그림 3] 당선자 평균연령의 변화	6
[그림 4] 민주당내 그룹의 세력분포	10
[그림 5]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23
[그림 6] 하토야마 가계도	28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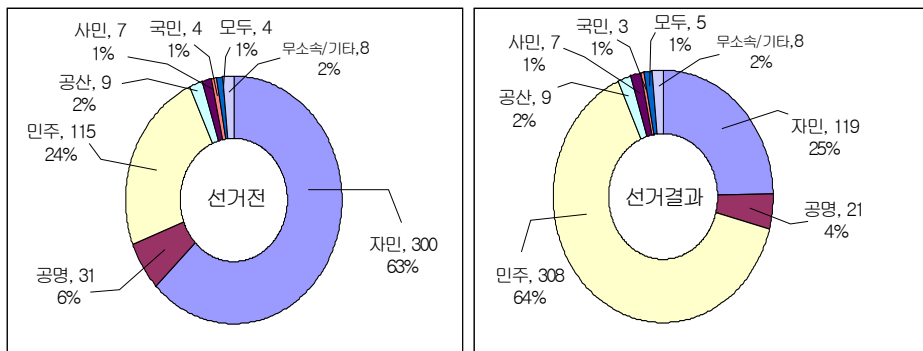
- 8월 18일 공고되어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음
 - 민주당은 절대안정다수의석(269석)¹⁾을 크게 상회하는 308석을 획득하였으며 1955년 자민당 창당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이 단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음
 - 민주당은 자당의석 308석과 연립의 가능성이 높은 사민당(7석), 국민신당(3석), 신당대지(新党大地, 1석), 일본신당(1석), 무소속(2석) 등의 의석을 합하면 총의석수(480석)의 2/3(320석)를 넘는 의석분포를 보이게 됨
 - 중의원에 한정한다면 헌법개정안도 가결 가능하며, 상원인 참의원에서 부결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의석의 2/3를 넘기 때문에 민주당은 참의원의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 선거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221석을 얻었고, 비례구에서도 87석을 얻어 선거 이전의 115석에서 무려 193석을 추가하였으며, 4개의 비례블록에서는 후보자가 부족하여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다른 정당에 이월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음
 - 비례구에서 원래 획득가능한 의석임에도 비례명부에 남은 후보자가 적거나 부활당선에 필요한 득표를 얻지 못해 타당으로 이월되는 의석양도 현상이 4석 발생하였음²⁾

1)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점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인 269석을 넘어 집권여당으로서 안정된 국회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2) 긴끼(近畿)블록에서 민주당은 비례명부 1위에 중복후보를 44인 올리고, 그 아래에 단독후보 8인을 배치하였으나 중복후보 41인이 소선거구에서 당선되고, 단독후보가 전원 당선됨으로써 비례구의 당선자가 모자랐음. 모두당(みんなの党)은 비례표에서 1석을 얻는다는 계산이었지만 비례구의 유일입후보자인 오사카9구의 요시노 고이치(吉野宏一)후보가 부활에 필요한 유효투표 총수의 1/10을 얻지 못하여 자민당의 2인

□ 반면, 자민당은 소선거구에서 64석, 비례구에서 55석을 얻어 전체 119석으로 선거 전 300석(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하면 331석)에서 181석을 잃는 역사적 참패를 당하였으며, 창당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음

<그림 1> 총선 결과



*전체의석: 480석(지역구 300석, 비례구 180석)

□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정권교체”에 있었으며, 199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지 15년 만에 자민당이 정권을 담당해온 이른바 ‘55년체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 1993년 자민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비자민(非自民) 8개 정당에 의한 호소가와(細川)연립정권이 발족했지만, 자민당 이외의 정당으로 양대정당간 정권교체는 전후 처음이어서 전후 정치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과 공명당의 1인이 뜻밖의 행운으로 당선됨. 한편 토카이(東海)블록에서 모두당이 비례에서 1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유일한 후보인 시즈오카1구의 사토 쓰요시(佐藤剛)가 부활당선에 필요한 득표를 하지 못해 민주당 토카이 블록의 41위 후보 이소가이 카요코(磯谷香代子)가 당선됨

- 1994년 정치개혁의 목표는 여야당간의 정권교체가 있는 긴장감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음
- 정권교체는 정권담당 주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자체의 변화로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등장이 가져올 정치와 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민주당의 하토야마(鳩山) 대표는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의 연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들 정당과의 정책조율도 국정운영에 중요한 관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II. 총선결과 분석

1.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1996년의 중의원 선거부터 도입되었으며, 전국을 300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한 사람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와 11개 블록으로 나누어 총 180인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혼합식으로 총 480개 의석을 두고 경쟁을 벌이며, 소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명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을 각각 기입하는 자서식(自書式)의 투표방식을 택하고 있음
- 비례대표는 블록마다 정당의 득표수에 따른 ‘동트(d'Hondt)방식’³⁾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명부순으로 각 당의 당선자가 결정됨 정당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당은 소선거구의 후보자를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소선거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부활당선’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복 입후보자에 한해 비례명부에서 동일순위가 될 수 있음. 소선거구에서 패한 경우, 당선자에 얼마만큼 가까웠는지를 나타내는 ‘석패율’로 비례 당선자가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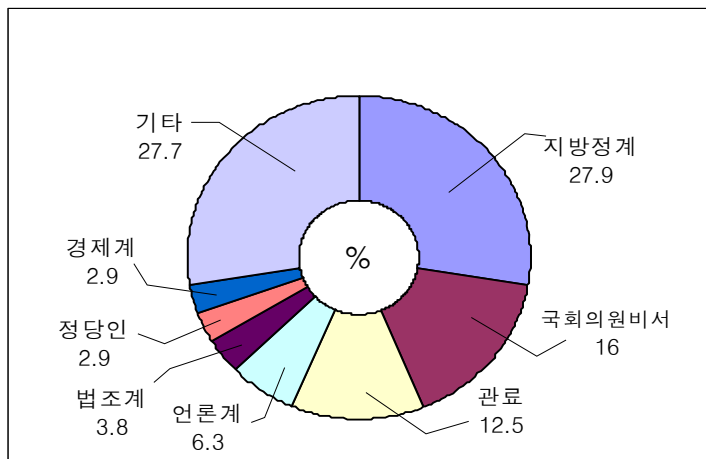
2. 당선자 분석

- 당선자 분석
 - 출신분야별 분석

3) 동트방식은 정당의 유효득표수를 순차적인 정수(1, 2, 3...)로 나누어 그 몫이 최대인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임. 잔여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분배됨. 예를 들어, A, B, C 정당이 각각 10,000, 6,000, 1,500 표를 얻었다면, A는 5석, B는 3석, C는 2석을 차지하게 됨.

-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출신분야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등 지방정계 출신이 27.9%로 전체의 약 1/4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회의원비서 16.0%, 관료 12.5% 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순위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는 없음
- 주요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지방정계 27.6%, 국회의원비서 15.9%, 관료 1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민당도 각각 31.1%, 20.2%, 17.6%로 나타나 양당의 ‘인재공급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남
- 공명당은 법조계 출신자가 가장 많은 반면 공산당은 정당 당료가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음. 사민당은 7인 중에 지방정계 출신이 3인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신당은 3인 중 2인이 관료 출신임

<그림 2> 당선자 출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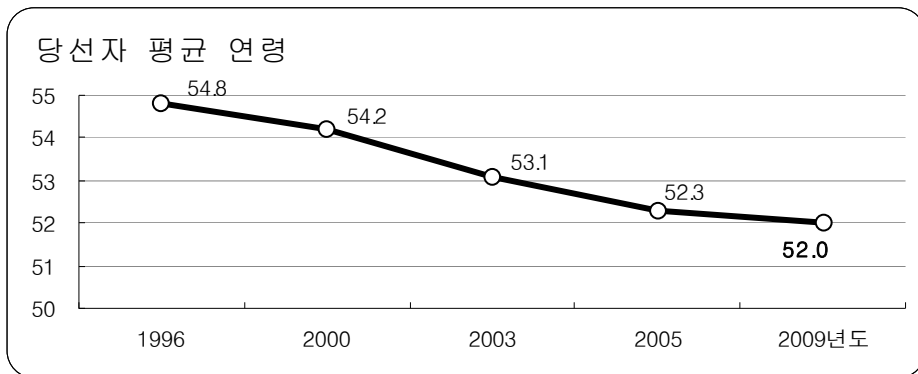
○ 당선자의 평균연령 분석

-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지난 선거의 52.3세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음. 정권교체를 내세운 민주당의 젊은 입후보자가 잇달아 대거 당선된 결과, 자민당이 우정민영화 반대세력

에 대한 자객으로 다수의 신인을 공천하여 당선되었던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최고령은 민주당의 구쓰카케 데쓰오(沓掛哲男, 비례대표)로 79세이고, 최연소자는 같은 당의 마쓰오카 히로타카(松岡広隆, 비례대표)로 27세임
- 주요 정당의 평균연령을 보면, 민주당이 49.4세로 가장 낮고, 이어서 공산당 56.4세, 자민당 56.6세, 공명당 58.0세, 사민당 61.0세의 순임

<그림 3> 당선자 평균연령의 변화



□ 여성 후보의 선전

- 이번 총선에서 여성은 229인이 입후보하여 소선거구에서 24인, 비례대표에서 30인이 당선되어 전체 54인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었음. 이는 2005년의 43인을 상회하며,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당선자 수를 기록하였음. 당선자 전체에서 여성의 비율은 11.25%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섬
- 민주당은 자민당의 유력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에 여성신인을 적극적으로 공천하여 지난 선거에서 7인의 당선자를 배출했던 것과는 달리 약 6배인 40인의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함
- 반면 자민당은 여성이 대활약을 했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가

- 26인에서 8인으로 격감하였고, 공명당은 3인, 공산당은 1인으로 지난 선거보다 각각 1인씩 감소하였으며, 사민당은 지난 선거와 같은 2인이었음
- 여성 당선자를 출신분야별로 보면, 지방의원이 16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언론계 출신 7인, 국회의원비서, 의료복지종사자 각 3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초선은 26인으로 여성전체의 5할미만을 차지함. 최고령은 71세의 이시게 에이코(石毛えい子)이고, 최연소는 28세의 후쿠다 에리코(福田衣里子)로 모두 민주당임
 - 민주당의 여성 파워가 자민·공명당 거물들의 아성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2005년 고이즈미 수상의 미녀자객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았음
 - 나가사키 2구에 출마한 후쿠다 에리코(福田衣里子, 28)는 10선에 도전한 큐마(久間) 전 방위상을 꺾었고, 도쿄10구의 민주당 신인인 에바타 다카코(江端貴子, 49)는 전회 우정민영화로 해산된 후 실시된 선거에서 자객으로 주목을 받았던 환경상과 방위상을 지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57)를 물리쳤음
 - 민주당 전의원인 아오키 아이(青木愛, 44)는 도쿄12구에서 공명당 대표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63)를 물리쳤음
 - 고이즈미(小泉) 칠드런(Koizumi Children: 고이즈미를 추종하는 의원)의 대거 낙선
 - 우정민영화로 인한 국회해산 후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고이즈미 칠드런이 대거 낙선하였음
 - 자민당 소선거구 공천으로 65인, 비례 단독후보로 8인, 타당·무소속으로 4인을 포함한 77인이 입후보하였지만, 소선거구에서 3인, 비례구에서 7인을 합하여 10인이 당선되는데 그쳤음
 - 고이즈미 칠드런은 4년전 83인이 당선되었으나 고이즈미 개혁의 실패로 그들의 명암마저 갈리게 되었음
 - 평론가들은 고이즈미 개혁이 자민당을 치료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생명유지장치’에 연결한 것뿐이라고 혹평하기도 함(Financial Times 2009. 8. 27)

- 고이즈미의 탄탄한 인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쇄신하기 위해서 당이나 관료의 이익에 도전하는 강한 열정을 평가한 것이었으나, 고이즈미가 물러나면서부터 자민당은 개혁으로부터 후퇴하고 이탈하는 유권자를 끌어안을 방안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3. 투표율 변화

□ 투표율 상승

-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9.28%로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이는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67.51%와 비교하면 2% 포인트 높게 나타난 수치이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래 5번째의 총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임

□ 기일전 투표⁴⁾로 투표율 견인

- 투표율 상승에는 기일전 투표제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일전 투표가 실시된 과거 3번의 국정선거에서 가장 높은 기일전 투표를 기록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1,080만명보다 높은 1,398만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1할을 넘는 13.40%에 이르는 수치로 2005년 총선의 1.56배에 달하였음

4. 파벌정치에 미친 영향

- 민주 압승, 자민 참패의 선거결과는 장기간 지속돼온 자민당 내의 파벌정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중의원 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한 자민당 각파의 세력은 격감하

4)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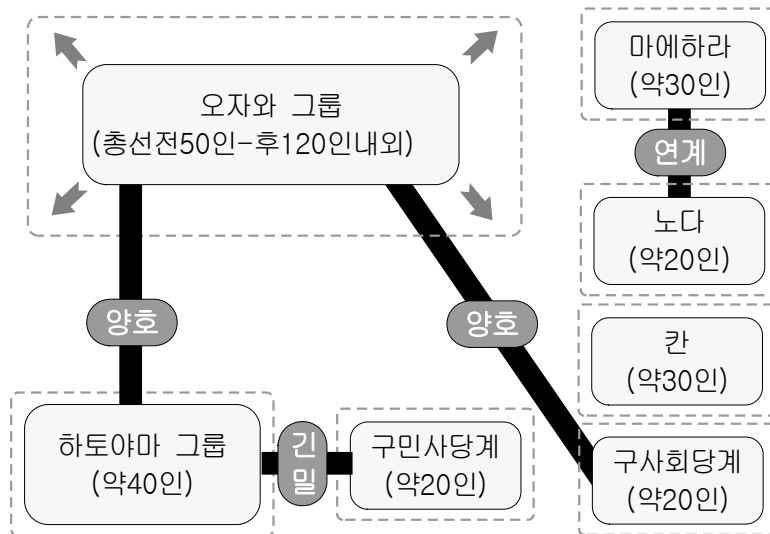
- 였음. 3인의 파벌영수가 소선거구에서 패배함으로써, 그 쇠퇴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가져옴⁵⁾
- 후쿠다 정권까지 4대를 계속해서 수상을 배출한 최대파벌인 마치무라파(町村派)는 회장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관방장관이 소선거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간신히 당선됨. 당선자도 선거 이전의 57인에서 반수 이하인 23인으로 줄어들었음. 참의원 수를 포함하면 최대파벌의 입장은 유지하였다고 말하지만, 영향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쓰시마파(津島派)는 회장인 쓰시마 유우지(津島雄二)가 해산 직전에 정계은퇴를 표명하여 우두머리를 잃은 채 선거전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당선자수는 선거 이전과 비교해 약 1/3에 해당하는 13인에 그쳤음
 - 회장인 코가 마코토(古賀誠) 선거대책본부장대리가 이끄는 코가파(古賀派)는 반감하여 25인이 되었음
 - 회장인 야마사키 타쿠(山崎拓)가 낙선한 야마사키파(山崎派)는 18인 감소한 16인이 되었음
 - 회장인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간사장이 비례부활한 이부키파(伊吹派)는 11인 감소한 8인이 되었음
 - 아소 다로(麻生太郎) 수상이 이끄는 아소파(麻生派)는 반감하여 8인이 되었음
 - 코무라파(高村派)는 7인이 줄었고, 니카이파(二階派)의 당선자는 회장인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 1인 뿐임
- 반면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대행을 중심으로 한 오자와 그룹이 중·참 양원에 120인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는 새 정권 탄생후 오자와가 수의 힘을 배경으로 발언력을 높여

5) 이하 자료는 時事通信 2009. 8. 31 참조

갈 것으로 보여 막후에서 권력을 행사하되 전면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 이른바 ‘권력의 이중구조’ (産經新聞 8월 28일)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을 낳기도 하였음

- 오자와 그룹은 중의원의 젊은 의원으로 구성된 일신회 등을 중심으로 중의원 해산 전에 50인에 달하였으며, 선거전에 도움을 준 신진들을 합하면 민주당내 제일의 파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반해 하토야마가 이끄는 그룹은 선거후 약 60인 정도, 칸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은 40-50인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민주당내 그룹의 세력분포



*자료: 産經新聞, 2009. 8. 28

III. 자민당 참패의 원인과 배경

1. 자민당 참패의 원인

- 자민당을 지지해온 고도성장 기반 붕괴
 - 1990년대의 경기침체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장기간의 고도경제성장과 부의 균등한 배분이라는 기본적 기반이 무너졌음
 -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 을 거치면서 저성장·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양극화로 일본경제가 피폐화 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일본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성장률 하락과 수출 급감으로 더욱 고전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불만이 폭발하였음
 - 지금까지는 40년 이상 안정된 국정운영과 경제성장 그리고 비교적 균등한 소득분배를 해온 자민당의 업적에 신뢰를 보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에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민당 불만세력을 흡수할 현실적 대안세력의 등장
 - ‘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유권자들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회당에 정권을 맡기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음
 - 냉전구조가 무너지면서 국제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그동안 국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자민당과 사회당의 보-혁구도가 보-보구도로 재편되면서 자민당 지지기반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음
 -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이 탄생한 이후 신진당이나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비자민당 그룹이 현실적인 대안 정당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 파벌다툼과 세습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

- 2005년 9월 총선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우정민영화 승부수로 대승을 거둔 후 1년에 한 번씩 내부 파벌다툼으로 총리를 바꾸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밀실담합에 의한 구시대 정치가 계속됨
- 고이즈미 이후 자민당 총재를 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 수상은 모두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파벌 간 담합의 결과로 탄생한 총리임
- 자민당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세습의원 문제였음
 - 기존 303명의 자민당 의원중 무려 108명이 지역구를 윗대로부터 물려받았음
 - 이번 총선에도 은퇴를 선언한 고이즈미 전총리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자신의 차남 신지로(進次郎, 28)에게 지역구를 물려주었음
- 이번 총선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민주당에 몰린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였으며, 민주당은 “3촌 이내”의 세습출마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하기에 이름

□ 뿌리깊은 정관유착 구조

- 정관유착은 고도성장기에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됨
- 잇따른 정치부패 사건과 더불어 정치와 돈의 커넥션,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 대국민 서비스의 약화 등 일본사회의 부정적 현상의 근원에 정관유착구조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이는 결국 자민당 책임론으로 연결됨

□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조직의 이반

-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조직이었던 농협, 의사회, 토목·건설업계, 특정우편국장회 등의 지지가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자민당이 지지

단체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되었음

- 특히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노선 하에서 기존의 이익유도 정치에 익숙해 있던 업계, 농촌, 지방의원 등 자민당을 지탱해온 ‘집포머신’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음(毎日新聞 2009. 8. 31)

2. 정권교체의 역사와 배경

- 일본 자민당은 1955년 11월 15일 구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출범한 이후 금년까지 사실상 54년간 장기집권을 해왔음
- 이른바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자민당 일당집권 체제는 1993년 자민당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에서 일본신당 등으로 구성된 호소가와(細川) 내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내건 자민당의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에 대해 사회당, 공명당 등 야당이 1993년 6월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여 가결되어 이루어짐
 - 미야자와 전총리는 즉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7월 18일 총선을 실시하여 자민당이 제1당을 유지하였으나 과반의석은 상실하게 되었음
- 이에 일본신당, 공명당, 사회당, 신생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등 비자민·비공산 8개 당파가 연립정권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호소가와 내각이 출범하였음
 - 호소가와 총리는 1994년 1월 소선거구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루었으나, 정부·여당과 사전조율 없이 ‘국민복지세’ 구상을 발표했다가 여권내 반발을 초래하여 입지가 흔들렸음
 - 호소가와 전 총리는 1994년 3월 사가와 규빈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그 다음 달에 퇴임하여 8개월의 단명 총리로 끝나게 되었음
- 이어 소수당 연립정권은 하타 쓰토무(羽田) 신생당 당수를 총리로 선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키가케와 사회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여 하타 전총리는 2개월만에 사퇴하게 됨

- 정권은 다시 자민당과 사회당, 사키가케 연립정권으로 넘어가 무라야마(村山)가 총리로 선출되어 자민·사회당 연립정권이 형성되었음
- 이후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을 형성하며 정권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참의원의 다수를 민주당에게 뺏기게 되었고, 결국 상원과 하원의 다수가 다른 이른바 ‘뒤틀린 국회’ (ねじれ國會)가 출현하여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음
- 1955년 보수합동에 의해 자유민주당이 창당된 이래 1993년의 10개월여의 비자민 정당 연립인 호소가와 내각과 하타 내각이 등장한 이외에는 50년 이상 자민당이 단독 또는 연립으로 집권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옴

IV. 민주당 정권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 manifesto)와 정책전망

1. 민주당 매니페스토

- 민주당의 정권공약(manifesto)은 “생활을 위한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토야마정권의 정권구상으로 5원칙과 5가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5가지 원칙은 △관료중심의 정치로부터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가(政治家) 주도의 정치로, △정부와 여당의 이원체제로부터 내각아래에 정책결정을 일원화, △각 성청의 할거주의에 의한 성의 이익으로부터 수상중심의 국익으로, △중적인 이권사회로부터 횡적인 유대형 사회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역주권으로의 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5가지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이상 정무 삼역), 대신보좌관 등의 자리에 국회의원 약 100명을 배치하고, 정무 삼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여 정책을 입안, 조정, 결정하도록 함
 - 각 대신은 각 성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내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함. ‘각료위원회’를 통하여 각 성청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를 사전 조율함. 사무차관회의는 폐지하고, 의사결정은 정치가가 행하도록 함
 - 총리관저 기능을 강화하고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하여 국민의 우수한 인재를 결집하고 정치 주도를 통해 신시대의 국가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의 틀을 편성함
 - 사무차관·국장 등의 간부 인사는 정치 주도하에서 업적 평가에 입각한 새로운 간부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정부 간부직원의 행동규범을 설정함
 - 낙하산 인사에 의한 알선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행정쇄신회의’ 를 설치하고, 모든 예산이나 제도의 자세한 조사를 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부정을 배제함. 관·민,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점검하고 정리를 행함. 국가행정조직법을 개정하고, 성청(省庁) 편성을 기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주요 내용

○ 정치·행정·예산구조 개편

- 의원의 세습과 기업단체헌금은 금지하고, 중의원 정수를 80석 삭감
- 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정(政)과 관(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 구조의 일대혁신을 기함
- 국가의 총예산 207조엔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세금의 낭비를 차단함
- 이를 위해 현재의 정책·지출을 모두 재점검하고,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며, 국가가 행하는 계약을 적정화 함

○ 자녀 교육·양육

- 중학교 졸업까지 1인당 연 31만 2,000엔의 ‘자녀 수당’ 을 지급
-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무상화하고, 대학은 장학금을 폭넓게 확충
-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보호 대상 모자·부자 가정에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소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연금·의료·복지

- ‘연금통장’ 을 발급하여 연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
-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월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함
-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폐지하고, 의사의 수를 1.5배로 늘림
- ‘장애자 자립지원법’ 을 폐지하여 장애자 복지제도를 말본적으로 재검토함

○ 지역주권

- ‘지역주권’을 확립하고, 그 첫걸음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폭넓게 증가시킴
- 고속도로의 무료화, 우정사업의 근본 수정을 통하여 지역을 활력 있게 함
- 가스미가세키(霞が関)⁶⁾를 해체·재편성하여 지역주권을 확립함

○ 고용·경제

-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1%로 인하함
- 월 10만엔의 수당을 주는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구직자를 지원함
- 고용보험을 모든 노동자에 적용하며, 비정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
- 지구온난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함
- 농업의 호(戶)별 소득보상제도를 창설함

□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일정표

-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의 형식요건 뿐만 아니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다음의 <표 1>은 민주당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일정표임
- 민주당은 가계지출에 필요한 돈의 지출을 늘려 생활불안을 해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매니페스토 추진일정표를 통해 제시한 예산의 재원은 △국가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세금낭비나 불요불급한 사업에서 삭감하여 9조 1,000억엔을 확보하고, △특별회계의 준비금과 적립금 등의 활용, 정부자산의 계획적 매각을 통하여 5조원을 충당하고, △조세특별조치 등을 수정하여 2조 7,000억엔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6) 도쿄 제일의 관청지구. 이곳에 있는 행정기관은 일본 농림수산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법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재무성, 검찰청, 내각부, 경시청, 국세청, 특허청 등으로 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이 들어서 있다.

<표 1> 민주당 매니페스토 추진일정표

항목	2010년	11년	12년	13년
자녀수당, 출산지원: 연31.2만엔의 자녀수당 및 출산일시금	자녀수당반액실 시 2.7조엔	5.5조엔		
공립고교 실질무상화 사립고교생에도 상당액 지급	0.5조엔			
연금제도의 개혁: 연금기록문제 대응 신 연금제도 창설	기록문제 집중대응기간 (0.2조엔)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적 합의	제도설계: 신 제도의 결정 (관련 법 제정)		
의료·개호보험 재생 의료부족의 해소, 신형인플루엔자 대책등, 개호노동자 대우개선	의료부족 해소 등 단계적 실시 1.2조엔	1.6조엔		
농업의 호별소득보장 판매농가대상 소득보장	조사·모델사업· 제도설계	1.0조엔		
잠정세율의 폐지 가솔린세 등 잠정세율 폐지·감세	2.5조엔			
고속도로 무료화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무료화	단계적 실시			1.3조엔
고용대책: 고용보험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확대적용, 구직지원등 소요액 총계	하반기 0.3조엔	0.8조엔		
7.1조엔	12.6조엔	13.2조엔	13.2조엔	
기타 정책: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대학장학금 확충,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지원등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순차실시			3.6조엔
2013년도 소요액: 16.8조엔				

*자료: 民主党マニフェスト, pp. 3-4. 朝日新聞(2009. 8. 22)

2. 국내정치

□ 정치가(政治家) 주도의 정치로의 전환

- “관료주의 개혁”은 이번 총선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으며, 민주당은 관료주도의 정책결정에서 탈피하여 수상주도의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매니페스토에서 약속하였음
- 1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정부에 보내 기존의 정관유착관계를 끊고, 중앙관료체제에 의존해온 자민당식 정치와 결별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됨
 - 국회의원을 각 부처의 각료,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내려보내 인사·정책결정권을 장악하고, 예산편성의 기본 틀을 짜는 총리실 직속 ‘국가전략국’을 신설할 것으로 공약하였음
- 이렇게 되면 기존의 ‘族의원’과 관료사이에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해조정이 소멸되고 기존의 업계 단체의 역할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금낭비 방지

- 독립행정법인·공익법인 등 4,504개 법인에 25,245인의 국가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이들에게 12조 1,334억엔(2007년도 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관제담합이나 수의계약 등 세금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삭감과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의 80석을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정치·행정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정치와 행정의 투명화

- 낙하산 인사, 수의계약, 관제담합,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미일밀약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숨겨져온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은 이제까지 ‘사라진 연금’에 대한 폭로를 통해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정치·행정에 얽힌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가와 관료의 접촉에 관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3. 대(對)한반도 정책

□ 대한반도 정책 기조

- 하토야마는 굳건한 한일관계를 기초로 미·중 양국과 북한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 하토야마는 지난 6월 대표로서의 최초 외국 방문지가 한국이었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공약에서 명문화하고 있을 정도로 우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수면하에 잠복할 것으로 전망됨

□ 독도문제

- 민주당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총선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됨
- 민주당의 공약은 지난 7월 17일 발표된 방위성의 ‘2009년도 방위백서’ 나 지난해 7월 발표된 문부성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의 독도관련 기술보다 더욱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됨

□ 야스쿠니(靖國) 신사

- 자민당 정권시절 수많은 외교마찰의 진원지였던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대신해 총리와 각료들이 공식 참배할 수 있는 ‘비종교적 국가 추도시설’ 을 건립할 것을 공약하였음
- 하토야마는 “과거 일본의 행위를 주시하는 용기를 가지면서 미래 지향으로 임하는 의지는 다른 정당에 지지 않는다” 며 자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바 있음(8월 11일 외신기자회견)

□ 북한문제

-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토야마 정권의 기본 전제임.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임
- 핵·화학·생물 무기나 미사일의 개발·보유·배치를 폐기시키기 위하여 한·미·중·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화물검사의 실시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임
- 납치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임과 동시에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임

□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

- 재일동포가 다수인 일본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 조기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특히 민주당은 창당 당시의 기본정책에도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약속하였고, 당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모임도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 실현이 기대됨

<표 2> 민주당과 자민당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구분	민주당	자민당
한일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 -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양호한 한일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 -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한·중·일 3개국의 강력한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 - 한일 FTA체결 및 독도문제 해결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종합적인 외교력을 한층 강화 - 중국, 한국 등 근린국과의 관계를 증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함께 구축
북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므로 결코 용인불가 -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개발·보유·배치를 포기하도록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 - 납치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에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 기본 -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외국 정부 및 유엔,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국제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국가위신을 걸고 납치피해자 전원의 조기 귀국을 실현 - 북한이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수출금지 등 대북조치를 계속 -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행동을 미국, 한국, 관계 각국과 일치해 실시 - 국회에서 폐기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위한 법을 제정
영토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문제 해결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동시에 상당한 시간도 필요 - 영토주권을 갖고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현재 불법점거돼 있는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끈질기고 강력하게 협상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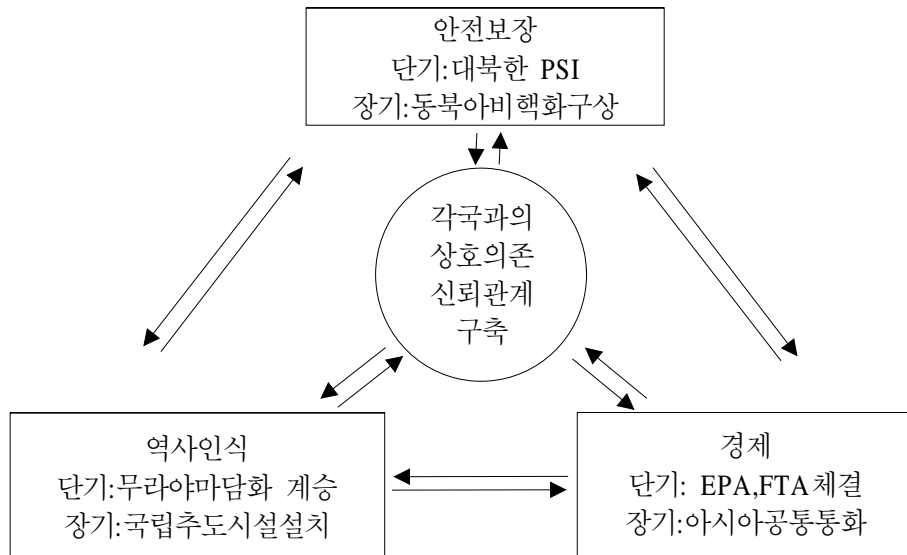
*자료: 양당 매니페스토 자료 비교 필자 작성

4. 대(對)아시아·대미정책

□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통해 민족주의를 고양시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해온 자민당과는 달리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탈민족주의로의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은 장기적으로 안전보장분야에서는 ‘동북아 비핵화 구상’을, 경제분야에서는 ‘아시아공통통화’의 실현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등과의 신뢰관계가 불가결하다는 판단임
- 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인식 문제의 해결은 안전보장, 경제 문제와 더불어 삼위일체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야스쿠니 신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임

<그림 5>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자료: 毎日新聞(2009. 8. 16)참조 필자 작성

-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아시아 외교를 강화
 - 중국,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모든 국가와의 신뢰관계의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대책,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
 - 아시아-태평양 모든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각 국과의 투자노동이나 지적재산 등 넓은 분야를 포함한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음

-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 구축
 - 민주당은 일본외교의 기반으로서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체적인 외교전략을 구축한 후에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일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촉진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며, 이 때 식품의 안전·안정공급, 식료자급률의 향상, 국내농업·농촌의 진흥 등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재편이나 주일미군기지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 민주당은 지금까지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보급지원을 일시적으로 철수시키고, 주일미군경비의 일본측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에 반대해 왔으나 집권 후 기존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변화모색은 국내외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우려도 있음

- 우애(友愛)외교 및 세계평화와 번영의 실현
 - 유엔을 중시한 세계평화의 구축을 지향하고, 유엔개혁을 주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임
 - 일본의 주체적 판단과 민주적 통제하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PKO) 등에 참가해서 평화구축을 향한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을 천명함

- 그러나 “국가로서 자립하고, 가치가 다른 사회와 공생한다 ‘는 하토야마의 우애외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하여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됨(産經新聞 2009. 8. 31)
- 동북아시아지역의 비핵화를 목표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나 컷오프조약(cut-off treaty, 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의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2010년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을 약속함

5. 경제정책

□ 민주당의 경제정책기조

- ‘수출보다는 내수’,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 민주당의 경제기조임
- 이를 통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가계소비를 늘리며, 기업활동을 증가시켜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을 이루겠다는 전략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8%에서 11%로 내려 국내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
- 아울러 자녀수당, 고교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 잠정세율 폐지 등의 정책에 의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임

□ 고용과 환경을 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제 실현

- 월 10만엔의 수당을 주는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과 생활보험 사이에 제2의 사회안전망(safety-net)을 창설하고, 고용보험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고 함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차세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온난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대담한 지원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더욱 높여 환경 관련산업을 장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임
- 중소기업 정책의 강력 추진
 -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경제 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부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에 중소기업관련 예산은 주로 경제산업성, 재무성, 후생노동성의 3개 성청이 소관하고 있으며, 시책도 별도로 행하여져 왔음
 - 이러한 획적으로 분할된 행정구조가 중소기업 시책의 지체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시책 전반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대신을 임명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음

V. 하토야마의 리더십과 민주당 정권의 과제

1. 하토야마의 정치와 리더십

□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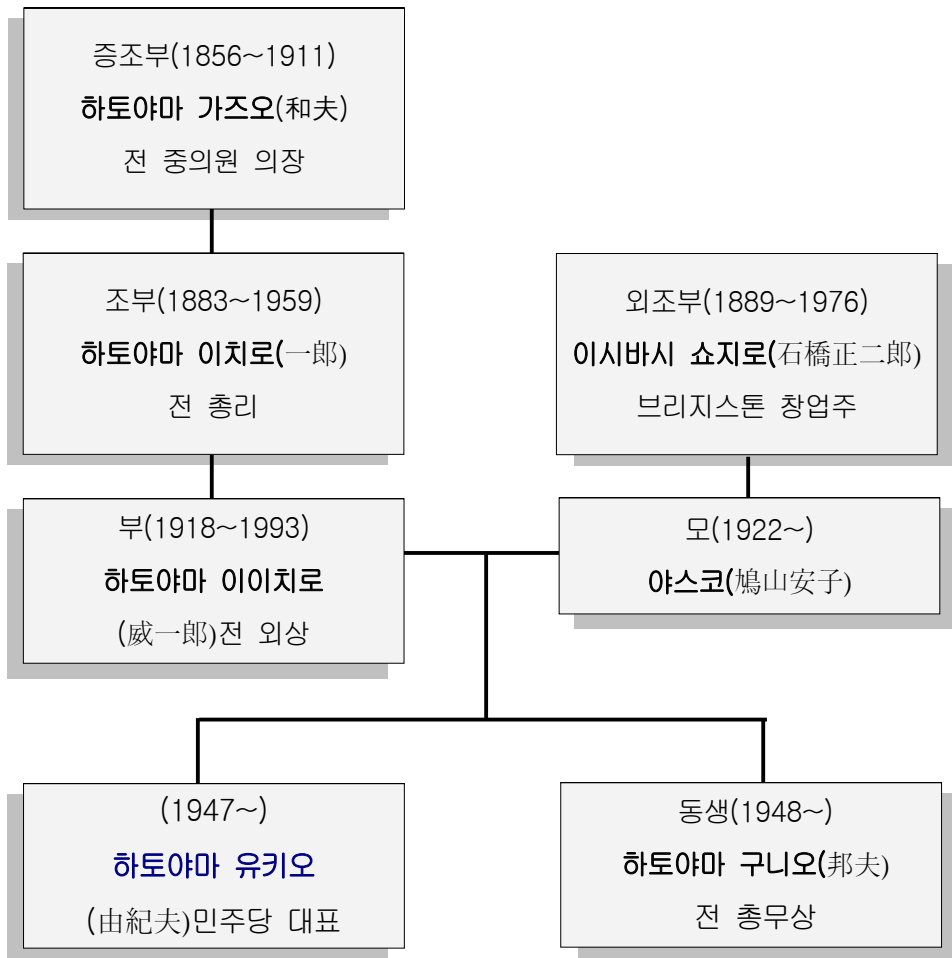
일반 경력	정치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62세 ○ 출생: 동경도 ○ 출신교: 동경대 공학부, 스탠퍼드대 공학박사 ○ 경력: 센슈대 경영학부 조교수 ○ 가족: 처, 1남 ○ 선거구: 홋카이도9구 ○ 취미: 클래식 음악감상 ○ 혈액형: O형 ○ 저작: 신헌법시안 ○ 좌우명: 우애(友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으로 당선 ○ 93년 신당 사키가케 창당 ○ 96년 구민주당 창당 ○ 98년 신민주당 창당 ○ 99년 당 대표에 취임 ○ 02년 당 대표 사임 ○ 09년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 사임에 따라 당대표 선거에서 당 대표로 취임

□ 정치철학: 우애의 정치

- 하토야마는 우애를 좌우명으로 내세우며, 우애의 정치를 강조하는데 이는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전 총리의 정치철학에서 비롯됨
- 하토야마가 말하는 우애사회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고, 국가간에는 평화롭게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를 말함 - 그의 조부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인 박애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용어라고 함
-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자민당 창시자인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임. 상대인 아소 다로 수상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전에 하토야마의

- 조부에게 정권을 빼앗긴 요시다의 외손자이어서 흥미를 끄
- 한편 그의 증조부인 하토야마 가즈오는 제국의회 시절에 중의원 의장을 지내며 일본의 근대화를 열어온 인물임

<그림 6> 하토야마 가계도



- 정치적 이상주의자?
- 하토야마는 39세에 자민당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1993년

- 자민당 분열시 이상주의를 내걸고 탈당을 하여 1996년 민주당을 창당하게 됨
- 야당의 세력확대를 위해 2003년 당시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과 합당할 때에는 혁신적인 당내 인사조치를 취하려다 당내반발에 부딪쳐 대표직을 사임함
 - 그는 일본 정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신념이 두터운 인물로 그의 우애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그동안의 일본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됨
 - 하토야마의 우애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그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가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한 것처럼 침략의 땅에 우애라는 기치하에 새로운 세력의 확산을 도모하는 대를 이은 역사의 전개로 흥미를 끄

2. 과제

- 자민당 50년의 관행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
 - 민주당 압승의 배경에는 자민당 정권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틀과 관행을 끊는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내재해 있음
 - 정권교체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나 일본의 경우 국내적으로 많은 정책의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임
 - 국내적으로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나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적으로 미일동맹과 동아시아와의 협력을 양립시키는 것이 중심이 될 것임
 - 따라서 그동안 자민당이 걸어온 길에서 벗어나 기존의 농정, 연금 정책, 비핵3원칙, 집단적 자위권 등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여 자민당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中西 寬 2009)
- 정치의 지도력 회복이 급선무
 - 민주당 정권의 최대 위협요소는 리더십 확보에 있음. 이번 선거에

서 민주당은 2005년 총선에서 이른바 고이즈미 칠드런이라고 불리는 신인보다 많은 신인 당선자를 배출함

- 반면 민주당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즉,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신인의원을 갖고 우왕좌왕 하면 정권의 구심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상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과제의 완급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역할의 중추에 국가전략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정권발족 후에 줄속으로 큰 권한을 갖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책과정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각 성청의 대신의 권한과 수상직속 스태프간의 권한 다툼이 생기고, 이것이 정권의 혼란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외교안보를 둘러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하토야마 정권에게는 기대뿐만 아니라 정권운영에 대한 불안한 시각도 많음
 - 이러한 불안은 외교·안보 정책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이 성공해 온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음
 - 실제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으로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에 대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불멸의 자유작전」(OEF, Operation of Enduring Freedom)에 대한 후방지원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의 연장 등에 반대해 온 바가 있음
 - 또한 민주당은 정권구상으로서 미국과의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를 제창하며 주일미군지위협정(SOFA)의 수정 등도 언급하고 있음. 게다가 마일간의 오랜 과제인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설에 대해서도 기존 양국 정부에서 합의한 안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오바마 정권의 불만을 살 우려도 있음
- 당내 합의를 통한 선명한 정책방향 제시가 요구됨

-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는 미일 동맹에 대해 전통적인 지지를 보내는 자민당에 가까운 현실주의자와 구 사민당 출신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읽기 어렵게 하고 있음
- 더욱이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민주당과 연립할 가능성도 높으며, 이 점도 정부 관료나 동맹국 등으로부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빈번히 한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온 과거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자민당 일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역사관을 가진 의원이 적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함
- 경제정책에서도 보다 규제개혁적인 경제정책을 취할 것인지, 오히려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노선정립이 필요함
- 고이즈미 정권 이전에는 민주당은 도시형의 규제개혁 지지층이 많았지만 고이즈미 정권 이후, 오자와 이치로 전 당수의 주도 하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지방의 지지를 강하게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참의원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위한 연립구성의 방향과 정책조율을 분명히 해야 함
 - 민주당은 중의원에서는 절대안정의석을 확보하였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립정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하토야마도 총선후 연립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고이즈미 내각의 우정민영화에 반대해서 자민당을 탈당한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신당이나 사민당과 연립을 추진하겠지만, 자민당의 참패로 인한 위기감을 가진 자민당 이탈자 그룹과의 연립이라는 와일드 카드도 있을 수 있을 것임. 정책적으로는 자민당 쪽이 민주당 보수파의 정책과는 가깝기 때문임
 - 민주당은 집권의 경험이 없고 정책 방향성에도 당내 합의가 약하기 때문에 신정책의 방향성은 연립구조에 의해서도 크게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당내 이중구조의 극복

-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195인 중 약 70인은 오자와가 선거전술을 직접 지휘하거나 공천에 깊이 관여한 이른바 오자와 칠드런(Ozawa Children)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당내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오자와 그룹이 정권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오자와는 당내에서 간사장을 맡아 내년의 참의원선거까지 진두지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이나 정권운영에 오자와가 깊이 관여하면 과거 자민당의 파벌구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책임지지 않는 막후정치와 같은 이중구조가 재현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선거공고 직전에 입당한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외상의 역할과 처우문제 등도 과제가 될 것임
- 하토야마는 당내와 정국운영에 오자와와의 관계를 잘 조절하며 ‘하토야마 색’을 잘 발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새로운 일본의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내의 일치된 지지가 더욱 요구됨

VI. 시사점

1. 정치적 측면

□ 정당에 대한 피로감의 극복

- 2006년 9월 인기절정 속에 수상직을 사퇴한 고이즈미 이 후 연이어 자민당 총재를 맡은 아베, 후쿠다, 아소 수상은 각각 1년 정도씩 스스로의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한 채 단명하였음
-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마저 점차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개혁을 통한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제도피로의 극단을 보여주었음
- 냉전구조의 종식,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에 있어 기존의 정당이 취해온 단순한 이익배분 정치로는 유권자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임
 - 고도성장기와 함께 지역개발이나 보조금·공공사업의 배분 등을 채널로 한 이익에 의한 지지조달의 메카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며(大嶽秀夫 1999), 이러한 경향은 결국 이익 이외의 목표가치를 상실한 정치의 왜소성을 보여 일본정치의 병폐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경향은 나라 전체의 정치를 우선하는 “큰정치 지향”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이익 지향’의 정치에 머무르게 하였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국민은 정치의 세대교체, 정권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유권자들도 점차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전통적인 지지정당을 이탈하여 무당파층으로 돌아서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의 지도자들도 유권자속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스스로의 리더십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한 정치의 신뢰회복

- 과거 일본의 선거운동은 중선거구 제도와 함께 개인 후원회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져 정당의 정책을 둘러싼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결국 선거는 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중심의 선거로 치러졌으며 정당정치는 실종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무당파층의 급증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4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병립제도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제도변화의 목적은 정당중심의 정치, 정책본위의 선거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
-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꾸준히 정책선거로의 방향전환이 논의되면서 결국 2003년 정당 매니페스토가 도입되어 정책중심의 정당대결이 본격화 되어 이번 선거를 매니페스토가 주도하는 선거로 이끌 수 있었음
- 이번 선거는 정당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투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생활을 지키는 정치’를 내걸고 정권교체를 외친 민주당의 매니페스토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됨
- 매니페스토 선거는 선거이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신공격성 이전투구와는 크게 구별됨. 구체적 매니페스토와 필요한 재원을 선거 전에 미리 유권자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권 후에 국회에서의 정책심의과정에 극단적 대립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임

2. 외교적 측면

- 한일관계 개선과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하토야마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공동체와의 근린 우호정책을 강조함
 -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해소되어 과거와 같은 소모적 갈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역사교과서 문제와 영토문제는 마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기존의 자민당 중심의 의원외교 채널에 있던 실세 정치인이 대거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 중심의 새로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원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하토야마의 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접목시켜 우리의 의원외교를 강화하여 이를 새로운 경제협력의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미중시 외교에서 친아시아 외교 가능성에 대한 대응
-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지역내 블록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룬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하여 미주전역을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구상 등이 이러한 경향을 말해줌
 -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간 정치적 측면에서 역내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한계를 겪어 왔음
 - 그러나 자민당정권의 붕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역사인식에 대한 양보 속에 안전보장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며 경제적 실리를 아시아에서 구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동아시아에서의 역내 통합에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동아시아에는 지역 내 통합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지역 내 각국의 의회 간 협력의 채널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임

3. 경제적 측면

- 한·일 FTA에 적극적 자세
- 민주당 매니페스토에 따르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이다
 - 이는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활용과 적극적인 FTA를 통한 성장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거 자민당이 농촌에 지지기반을 두어 농업분야의 대외개방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같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과거와 달리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지지기반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며 FTA 추진에 나설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임

- 특히 내년 참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하여 서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비하여 산업분야별 대비책과 협상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일 FTA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04년 11월 제6차 협상과 2008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음

- 이같이 한-일 FTA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90% 이상의 농산물 개방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56%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일본이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FTA의 영토조항에 독도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와 갈등요인이 있음

□ 수출위주형 산업구조를 내수위주형으로 전환

- ‘수출보다는 내수’,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기본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내수 시장 활성화 공약은 한국 제품의 대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 투자 확대를 내세운 만큼 의료용품·노인용품·교육기자재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중앙일보 2009. 8. 31)

- 특히 경기부양 또는 내수활성화 수단으로 자민당은 공공투자 확대 등을 중시하는 반면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현금살포식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문제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음
 - 하토야마의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 재검토, 낭비성·중복성 예산 축소 등을 통해 9조 1000억엔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들 사업 또한 각 지역구 숙원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은 미지수임
- 이처럼 온정적 복지예산의 지출과 재원확보의 문제는 한국의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참고문헌

- 大嶽秀夫 1999. 『日本政治の對立軸』. 東京: 中公新書.
- 渡部 恒雄. 2009. “歴史的な分水嶺となる8月30日の総選挙と次期政権の政策の方向性,” 東京財團칼럼. www.tkfd.or.jp
- 中西 寛. 2009. “安定した政治秩序を作れるか,” 産経新聞(2009 .8 .28).
みずほ総合研究所. 2009. “マニフェストにみる自民党と民主党の主要政策,” (2009. 8. 19).
- 民主党 . 2009. 民主党の政權政策 Manifesto 2009
- 自民党. 2009. 自民党 Manifesto 2009.
- 기타 일본 주요 일간지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 준 배민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현안보고서 제35호

발 간 일 2009년 9월 3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0631-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NARS 국회입법조사처
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www.nars.go.kr / 02)788-4510

| ISSN 2005-3215 |